



세월호에 과격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갈수록 분명해지는 국가의 책임 특조위 강제종료 반대! 특별법 개정!

6월 17일 <미디어오늘>이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백 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현재 특조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쏟아지는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더 커진다.

이 같은 폭로는 박근혜 정부가 그간 밝혀진 구조 방기와 규제 완화의 책임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직접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참사 당일 화물 과적은 이윤에 눈이 먼 청해진해운의 책임으로만 지적돼 왔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여객이 돈이 안 되자 화물로 이윤을 만회하려고 철근과 생수를 실어 날랐고, 선원들의 항의에도 과적을 밥 먹듯이 했다.

세월호는 여객선이 아니라 사실상 화물선으로 운영됐다. 2014년 당시 검경합수부가 발표한 수치는 배가 급격히 기울면서 침몰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에 화물이 검찰 조사보다 5백여 톤 더 많은 2천6백49톤이 실렸다고 제기했다.

왜 철근을 실었을까?

<미디어오늘>이 밝힌 철근 4백 톤이 더 실려 있었다면 이는 승객 5천 명 수준의 규모다. 더군다나 철근 중 1백30여 톤은 선수갑판(C데크)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화물이 많이 실릴수록 선박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처음 기울 때 세월호를 더 빠르게 기울도록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청해진해운 한 관계자는 당시 실린 철근의 용도에 대해 “당일(2014년 4월 15일 화물 적재 당시)은 1백 퍼센트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게다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원래 계획보다 14개월가량 늦어져 정부는 시공 업체에 공사비 2백75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백여 명이 모인 6월 8일 국회 앞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

하면 제주 해군기지 공사기간을 맞추려 다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힘들 정도였는데도 무리하게 세월호가 출항했을 개연성이 있다. 지난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82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4월 16일 당일의 무리한 출항 이유를 진상규명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결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무리한 과적을 했고, 이것은 침몰의 직접적 원인 가운데 하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제주 해군기지 — 미국 해상MD 정책의 일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복무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해 왔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서 해상 MD정책의 중간기지 구실을 할 것이다. 또, 미국의 해양 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한국 정부가

철저히 미국의 패권 정책에 복무하는 것을 보여 주는 일 중 하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급속히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동아시아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불안정의 불씨를 키울 것이 자명하다.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철근을 실어 나르려다 무고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이윤 경쟁으로 빚어지는 국가 간 경쟁, 즉 제국주의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돼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정책을 지원하려고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만든 책임이 있다.

진실 은폐의 이유

왜 이제서야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일까? 수사 당시 검찰이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맡긴 화주에 대한 조사는 물류회사 진술서에 의존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검찰은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

적과 허술한 고박을 꼽으면서도 꼼꼼히 수사하지 않았던 셈이다. 정부의 책임을 덮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또한, 검찰이 침몰 원인으로 발표한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 주장도 2015년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듯 온갖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세월호를 인양하고 참사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항간의 의혹처럼 국경원이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세월호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수익을 쫓아 안전은 뒷전에 둔 것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6월 말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는 용의자가 직접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웬만한 진상은 다 밝혀졌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

따라서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진실 규명 은폐 시도에 맞서 분노를 모아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로 정부의 책임을 낱알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제주 해군기지의 연관성은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도전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후원해 주세요

※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 '집중이슈 — 세월호 참사에서 다양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드러나는 의혹에도 특조위 종료 강행하는 적반하장 박근혜

박근혜 정부가 구조 방기와 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침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특조위를 종료시키려 한다.

6월 21일 해수부는 일방적으로 특조위 종료를 선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이것이 특조위 활동 기간의 연장인 양 호도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7월부터는 현재 특조위 인원의 80퍼센트 수준으로 인원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인양 후 육지에 선체가 거치되면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알린 것뿐이다.

더군다나 진상 규명 조사 대상인 해수부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고 특조위 종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22일 즉각 해수부의 일방적 종료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수부의 주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두 차례 인양 실패는 사실상 정부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더 키우고 있다.

한편,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 조사를 배제하는



박근혜는 참사 직후에는 해경을 엄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해경 간부들은 줄줄이 승진했다. 이런 자들의 책임을 물으려면 진상 규명 운동이 강력해져야 한다.

조건으로 특조위 활동 연장 거리를 제안해 왔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를 보호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더민주당도 불길한 조짐을 보여왔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농해수위의 위원장인 더민주당 김영춘은 6월 14일 특조위 조사기한 연장을 위해서라며 "청와대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행정 조사 등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원

하지 않는 조사 쟁점은 과감하게 제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큰 논란과 반발을 낳은 바 있다. 더민주당 대표 김종인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 비난한 김재원을 정무수석에 앉힌 것을 두고 "원만하고 협치가 기대되는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이런 때일수록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이 중요하다. 4·16연대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더민주당, 국민의당과는 독립적으로 진실 규명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의 인양 요구를 세금 낭비인 양 취급했다. 온갖 무기를 구입하는데에는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 부으며 말이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를 바다 속에 내던진 박근혜의 논리답다.

정부는 참사 1주기가 지나고 나서야 인양 업체를 상하이 샬비지로 선정했다. 이때조차 인양 기술이 아니라 비용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유실방지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양 초기 과정인 선수들기도 당초 정부의 발표를 훌쩍 넘긴 올해 6월에서야 시작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선수가 4m가량 들렸지만 선수를 지탱하고 있던 와이어가 끊어졌다. 정부는 기상변수를 예상하지 못하며 기상 탓을 한다. 그러나 조류 변화가 심한 맹골수도에서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기후 변화도 견디지 못할 와이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했는지 보여 준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로 이뤄졌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세월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달 초 인양을 앞두고 특조위가 실지조사를 하려는 것마저 막았다.

인양이 늦어질수록 깊어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려면 반드시 세월호는 인양되어야 한다. 인양과 철저한 정밀조사로 침몰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고(故) 김관홍 잠수사를 애도하며 고인의 바람대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2016년 6월 17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 수색에 참가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헌신한 고(故) 김관홍 잠수사가 애통하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은 살아생전 진실을 은폐하는 정부에 맞서 기만적인 국가기관들을 폭로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 등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국가가 구조를 방기하는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사들을 국가는 외면했다. 당시 투입된 잠수사 25명 중 10~11명이 여전히 현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제

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그래서 고인은 민간 잠수사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이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6월 20일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희생자 범위를 확대해 구조에 헌신한 민간 잠수사들을 지원하고,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고인의 절박한 염원이었던 진실 규명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16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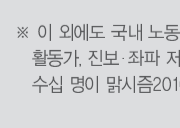
7월 21일(목) ~ 24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이호중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주디스 오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여성차별과 자본주의》(노동자연대) 저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70여 개 알짜 주제

- 세월호 참사
-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운동 - 쟁점과 과제
 -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 제국주의
- 노동자 운동
- 여성·성소수자 차별과 해방을 위한 투쟁
- ...

웹사이트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 이 외에도 국내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2016에 옵니다.

www.marxism.or.kr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facebook.com/marxism.or.kr